

등록금 1천만 원 유가·물가 급등 대운하 강행

이명박 한 달이 노무현 5년만큼 짜증난다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후보를 지지하라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②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

7~10면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18대 총선

3면



민주노동당 서울 중구
총선 후보 김인식 인터뷰

4면

하재근
'학벌없는 사회' 사무처장
-이명박의 교육 죽이기

2면



중국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중국 "시장사회주의"의 허상

6면

왜 티베트 저항을
지지해야 하는가

12면

파병반대국민행동
진로 논쟁

13면

여성 칼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11면

〈맞불〉 웹사이트를
http://www.
counterfire.or.kr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보수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 한반도에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위선적 평화지상론자들이다.”

－ 조갑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많은 만큼 올해는 파업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

－ 이명박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백골단을 살리나?” “잃어버린 1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백골단이었나?”

－ 백골단 부활 소식에 분노하는 민주화 원로들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
〈조선일보〉: “집권 한 달 만에 정권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이 나오게도 됐다.”
〈한겨레〉: “흠사 정권 말기를 보는 듯하다.”

－ 이명박 정부의 위기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교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 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도 없다. UN은 2002년까지 3차례 보고서를 통해 사형 존폐와 범죄율은 아무 상관없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가 존치하는 주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았다. 1976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2002년 범죄율이 1975년보다 40퍼센트나 낮았다.

지배자들이 사형제도를 유지·강화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김문수는 “사형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냐”며 본심을 드러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권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강화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켜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김은영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 죽이기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서울대학교 학생선발 지침》 지은이

아무래도 희대의 몽상가 정부가 들어선 것 같다. 꿈이 많은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꿈속에 빠져 자맥질을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 나라엔 희망이 넘쳐나는 것일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주요 국정 과제 실행계획’ 업무 보고 얘기다. 이를 전하는 국정브리핑 기사 제목이 “공교육 만족 ‘두 배로’ … 사교육비 ‘절반으로’”였다. 딸림 기사 제목은 ‘가난 대물림 끊기 위해 학교교육 살려야’였다.

참 좋은 말이다. 이대로 실행만 된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꿈이라서 문제다. 좀더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잠꼬대’라고 할 수 있겠다.

‘교육 살리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제시된 두 가지가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다. 이것은 우리 나라 위정자들이 대대로 내세웠던 ‘잠꼬대’ 레퍼토리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으로 길긴 동어반복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잠꼬대’가 표절도 아니고 단순한 리메이크도 아닌 확장·강화판이라는 거다. 지난 15년 ‘자유화·공교육정상화’ 정책이 가져온 건 공교육 파탄과 사교육비 폭발이다. 그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파탄과 폭발의 확장·강화판이다. 대파탄·대폭발 전야다.

잠꼬대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번역하면 ‘평준화 파괴’가 된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번역하면 ‘입시경쟁 강화’가 된다. 지난 15년간 벌어진 일들이다. 그 귀결은 양극화, 교육격차 확대, 신분세습 체제의 확립이었다. 그러므로 ‘가난 대물림 끊기 위해 학교교육’ 살리겠다는 말도 결국 잠꼬대다.

‘교육 살리기’라는 정책목표는 잘 봐주면 잠꼬대, 좀 더 진실되게 표현하자면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15년간 당해 왔던 일들이니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다.

자유화·다양화라는 아름다운 말이 교육 현실에서 실현된 것들을 열거하면 이렇다. ‘자사고·특목고·국제중의 등장’, ‘대학서열체제 심화’, ‘등록금 폭등’.

고교평준화는 각 개별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을 국가가 몰수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입시 시장을 국가가 폐쇄했던 셈이다. 여기에 ‘자유’가 들어오면 시장이 다시 열린다.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자유롭게 입시교육을 시키고, 자유롭게 비싼 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사고의 등장이다.

그에 따라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이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그러면서 ‘공교육 만

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하고 있다. 잠꼬대로 볼 수밖에 없다.

학교 선택, 학생 선발의 자유가 보장된 입시 시장이 대입 시장이다. 자유화는 대입 시장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입전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대학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전면적으로 학생 선발 경쟁에 나서게 된다. 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일류대와 삼류대·지방대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한다. 이것이 지난 15년간 벌어진 일이다.

서울 지역 일류대의 지위가 점점 더 특권화되고 있다. 또, 중상층 자녀들이 이 학교를 독점하는 경향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 농어민, 지방민, 비정규직,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의 자녀들은 서울 지역 일류대로부터 점점 더 배제당하고 있다.

입시자유화에 따라 대학서열체제가 심화되면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학벌 지위가 그에 연동해서 움직이게 된다. 일류대 학벌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더 상승하고 이삼류대·지방대 학벌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강남 중상층 자녀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노동자, 농어민, 지방민, 비정규직,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자녀들의 지위가 내려가게 된다. 지방대 졸업생의 60퍼센트 이상이 학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학교의 자율적 경영은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귀족학교가 되려는 경쟁에 뛰어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학교 평가로 각 학교의 서열이 나뉘는 상황을 조장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이 이루어져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학교 경영도 민간 자율에 맡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들은 등록금을 최대한 올려 학교 규모 키우기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중등교육은 중등교육대로 고등교육인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폭등하게 된다. 국가가 더 이상 등록금을 통제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자유화 정책으로도 등록금은 충분히 오른 상태다. 이명박 정부의 자유화 기조는 이 등록금 폭등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귀족대학이 되면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는 초등학교

될수록 입시 시장에서 학교 서열 지위가 강고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록금 폭등을 막을 길이 없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는 중등과정에서 입시교육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입시자유화로 입시경쟁이 극대화되고, 학교 서열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족이란 자기 자식의 입시성적 극대화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입시지옥에 허덕이며 사교육비를 최대한 쥐어짜 대입경쟁에 뛰어들지만 어차피 노동자, 농어민, 지방민, 비정규직,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의 자녀들은 서울 지역 일류대에 못 가 천민이 되고, 대학에 가더라도 막대한 등록금 때문에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저항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입시지옥,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 신분세습이라는 파탄의 고리는 확대·강화될 것이다.

새 정부는 학비 대출제도를 확충한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유화 기조로 가면 연간 등록금이 수천만 원 대로 뛰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수천만 원 빚쟁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대학생, 게다가 학벌 차별의 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대학생의 삶이 어땠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건 저항이다. 대학평준화, 최소한 국립대 무상·평준화를 기치로 모든 대학생이 결연히 일어나야 한다. 무상·평준화 원리가 대학에 들어오면 학벌차별이 완화되고 등록금도 인하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무상·평준화를 기치로 전선을 쳐야 한다. 그것만이 이 정부를 잠꼬대로부터 구원할 길이다.

1980년대에 한국 대학생들은 국가공동체와 민중을 위해 총단결해 투쟁했다. 현재 한국 대학생들은 민중과 국가공동체는 커녕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잠꼬대’가 통하는 세상이 됐다. 총단결 저항만이 교육과 학생이 살 길이다.

한 달 만에 파산하는 이명박 사기극과 18대 총선

전지윤

이명박 정부 한 달 만에 ‘속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공천에서 숙청 당하자 박근혜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한국노총 전 위원장 이 용득도 “나도 속고 노조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물론 이들은 이명박과 함께 국민을 속인 장본인들이다. 함께 도둑질한 다음에 훔친 돈에서 자기 몫이 적다고 도둑 신고하는 소동은 쓸쓸한 맛만 남긴다.

공범들이 뒤늦게 고발하기 전에도 이미 온 국민이 이명박 사기극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재벌 살리기였고 ‘국민 성공 시대’는 ‘강부자’ 성공 시대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은 장·차관 봉급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장관 연봉은 최고 7천만 원이 올라 2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개판 공천’ 덕에 ‘강부자 내각’은 강부자 국회로 이어질 판이다. 18대 총선에 등록된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을 빼도 33억 원이다. 재벌 출신 철새 김택기는 등록 첫날부터 4천만 원 어치 돈 봉투를 뿌리다 걸렸다.

재벌 총수들과 핫라인 핸드폰까지 개통해 머리맡에 두고 잔다는 이명박이지만, ‘서민 생활비 30퍼센트 절감’ 대선 공약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사라진 지 오래고, 유류세 10퍼센트 인하 이후 기름 값은 더 올랐다. 통신·정유 기업들의 이윤을 털끝도 건드릴 생각이 없고, 되레 의료·교육 시장화와 사유화로 재벌에게 더 많은 돈다발을 안기려는 정책은 ‘서민 지옥’만 낳고 있다.

재벌과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환율 하락과 물가 인상을 용인하는 이명박 정부가 52개 품목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강독을 무너뜨려 놓고 바가지로 물을

재벌 천국과 강부자 성공시대를 위한 이명박의 삽질이 계속되고 있다

퍼내는 격이다. 더구나 물가 인상의 핵심인 유가·등록금 인상을 방치·조장하는 물가 안정 대책은 사기일 뿐이다.

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사건들은 오로지 기업 돈벌이 기회만 보장해 주려는 이명박의 ‘재벌 천국, 서민 지옥’ 정책이 낳을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대재앙을 부를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이 혹시 지킬까 봐 걱정되는 대선 공약이 됐다.

너도 나도 ‘속았다’

인수위 때 부동산 투기꾼이 부동산 정책 자문위원이었듯이, 이명박의 노동정책은 전경련이 자문하고, 교육정책은 강남 학원장이 자문하는 듯하다.

더구나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이명박은 오로지 노동자·민중을 더욱 짓밟고 쥐어짤 생각뿐이다. “법과 질서만 지켜도 GDP 1퍼센트가 올라간다”며 임금 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말 살리고 싶었던 것 하나가 바로 김귀정·강경대·노수석 열사를 때려죽인 무시무시한 백골단이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는커녕 10년 동안 없었던 사형 집행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혜진이·예슬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형 집행과 억압 강화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이다.

‘폐법 척결’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상습 시위꾼’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사전 조처하겠다고 한다. 또, 시위진압 경찰에게 면책특권을 준다고 한다. 이미 전용철·홍덕표·하중근 열사를 죽인 경찰에

게 아예 살인 면허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개악과 반동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한 달 만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3월 21일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 중 벌써 36퍼센트가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정치 위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 추악한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강부자 내각’과 ‘재벌 천국’ 정책, ‘형님·개판 공천’을 함께 주도했던 자들이 이재오계, 이상득계, 박근혜계로 나뉘어서로 헐뜯고 책임을 떠넘기며 당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반 몰락하면서도 서로 잇속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명박이 개악과 반동을 계속하도록 ‘안정’ 의석을 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도 위선적이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추진, 노동법 개악 등으로 이명박 불도저의 길을 닦아 준 장본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견제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386 ‘개혁파’인 임종석이 낸 총선용 책의 추천사를 써 준 사람은 바로 한미FTA의 선봉장인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바로 재벌과 ‘강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 많은 정치 철새들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으로 손쉽게 날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개악과 반동의 이명박 불도저를 막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주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의 ‘강부자’ 성공 시대와 사교육비·의료비 폭등 시대에 민주노동당의 부유세와 무상의료·무상교육 정책은 더욱더 절실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진보적 정책들을 더 분명히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 ‘88만 원 세대’, 임시 지옥에 빠진 청소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이명박 불도저에 맞선 대중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공격 뒤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더 큰 공격이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신규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34.7퍼센트나 깎이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이상이다.

내는 돈은 ‘짚썴’ 줄이면서 받는 돈은 ‘왕창’ 줄이고 거기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5세로 늦추려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이 57세에 정년퇴직하면 7년 동안 손가

락 빨고 있으라는 말이다.

연금 개악은 단지 퇴직 후 먼 미래 일이 아니다. 줄어드는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은 공무원 노동자가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한다. 자장면 값도 오르는 심각한 물가인상 속에 연금 개악은 임금 삭감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더구나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이런 공격은 사기업과 사회 전체에서도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공동 파업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핑계로 연금 개악을 정당화하지만, ‘재벌 천국’을 위해 향후 5년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야기할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최근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연금 개악과 공무원 퇴출 등에 맞선 투쟁 건설에 집중할 때지 이명박 정부와 가망 없는 협상에 미련을 둘 때가 아니다.

지난 3월 19일 그리스의 양대 공공노조는 우파 정권의 연금 개악에 반대해 학교와 관공서·은행·병원이 대부분 문을 닫게 하고, 전기 공급까지 중단시키는 공동 파업을 벌였다.

연금 개악, 구조조정 추진으로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이렇게 맞서야 한다.

박천석(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대변인 출신 경쟁 후보들, 과연 누구를 대변해 왔나?



4월 9일 총선에 서울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김인식 후보를 만나 이번 총선의 의의와 출마의 변을 들었다. 김인식 후보는 ‘다함께’를 대표해 민주노동당 내 좌파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이번 18대 총선에 어떤 의미를 두고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 등장 후 첫 번째 선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1퍼센트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위해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에 대한 대중의 반감도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대중의 정서를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런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출마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나라당 견제론, 이명박 견제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 견제론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세력입니다. 이명박 정부로 가는 길을 닦은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견제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그다지 뜨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친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정당들이 서울 중구에 내보낸 후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출마하는 중구는 서울의 ‘4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중구에는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나경원 후보, 통합민주당 대변인 출신의 정범구 후보, 자유선진당 대변인인 신은경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자신이 대변인



지역 주민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김인식 후보

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대변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그들이 어떤 사회 세력을 대변하려 했는지, 어떤 정책을 대변하려 했는지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대부분은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습니다. 반면,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의 이익은 대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들이 배제한, 대다수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정당의 후보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음을 드러내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의 이러한 주장에 적지 않은 진보적 유권자들이 호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당 후보들과는 다른 김인식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주류 정치는 예외없이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민주당은 간간히 개혁적 미사여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이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공공서비스 사유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대다수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이 전쟁에 대한 태도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울 생각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또 하나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88만 원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의 분노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고,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기껏해야 비정규직인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기성 체제와 기성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감과 체념을 대표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금 상한제를 요구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절망과 분노를 넘어 스스로 저항할 때만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 세대에게 특별히 강조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분열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자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둘로 나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당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는 광범한 진보적 유권자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결한 노동자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점 때문에 진보적 유권자층이 과거만큼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변화를 향한 열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계급 적대 정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정서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정당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로 그런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을 지지하는 일에서는 두 정당이 함께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정리 장호중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중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부시

중국이 티베트인들의 항쟁을 진압하자 미국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래 중국의 수단 정권 지원에 항의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참가 거부] 요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주에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인도 북부의 달라이 라마를 방문해서 조지 W 부시를 더한층 압박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중국의 티베트 시위 진압을 비난한 반면, 부시 자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미국과 중국은 “복잡한 관계”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값싼 공산품을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은 이런 대미 수출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조 5천4백20억 달러(약 1천5백조 원)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있다. 중국은 이 가운데 상당 액수를 미국에 빌려준다. 그러면 미국은 그 돈으로 자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고 중국산 제품도 수입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 상호의존 관계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에 우호적인 이 관계의 이면에서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열강, 나아가 세계 열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위협적인 상대로 여긴다. 미국 국방부는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태세검토보고서(2006년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요 열강이나 신흥 열강 중에서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고, 만약 미국이 대(對)중국 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각종 군사적 교란 기술들을 이용해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 – 중국이 미국에게 공장이자 은행일 뿐 아니라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열강이기도 한 모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의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핵미사일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지난해 1월 인공위성 요격 무기를 시험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올림픽

미국이 이러한 사태 전개를 우려하는 이유는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뿐 아니라 우주 공간도 지배하려는 미국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중국에도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인공위성을 요격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냥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매우 모순적인 관계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공장이자 은행일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 지배력에 도전하는 최강대국이기도 하다. 더욱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다양한 사건들이 미국

의 세계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관 탈피”(decoupling)를 주장하는 경제 평론가들이 많았다. 그들의 주장인즉슨, 미국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브릭스(BRICs) –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 – 의 역동성 덕분에 세계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최면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경기 둔화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경제 자체는 분명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활황세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경제가 1980년대 말과 같은 거품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거품 붕괴는 톈안먼 광장 시위의 분출에 일조했다.

티베트 위기도 또 다른 불안정 요인이

다.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 카드를 이용해 – 그리고 한족의 피해를 집중 부각시켜 – 티베트인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중국 대중의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드는 데 그럭저럭 성공한 듯하다. 그래서 부시는 미국인들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중국 주석 후진타오에게 약속했다. <뉴욕 타임스>의 아시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커밍아웃 파티다. 만약 부시가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취소한다면 중국은 엄청나게 체면이 깎일 것이고, 그리 되면 북핵에서 인권 문제까지 두 나라의 협력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부시는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성과 국내에서 점차 커지는 반(反)중국 로비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모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부시의 후임자가 누가 되든 이 모순에 부딪힐 것이다.

이집트

새로운 파업 물결이 이집트를 휩쓸고 있다

호삼 엘하말라위

이집트 블로거, 사회주의 활동가

이집트의 민주화 활동가들은 방직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는 4월 6일을 ‘대중적 분노의 날’로 삼자고 제안했다.

최근 물가양등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에 맞선 파업과 시위 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007년에 쌀과 빵 같은 주식(主食)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식용유 가격은 4배나 올랐고, 닭고기 가격도 최근 3개월 동안 40퍼센트나 올랐다.

이집트의 많은 빈민들은 정부가 가격 보조를 하는 빵을 구입하려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에 충돌이 발생해 몇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각종 파업과 시위 들 때문에 무바라크는 군 제과점을 빈민들에게 개방해야 했고, 외환보유액 일부를 사용해 밀을 수입해야 했다.

중간계급

이제 투쟁 물결이 이집트 중간계급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학 교수와 의사 들도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전날 시위 진압 경찰이 대학들을 둘러쌌다. 무바라크 정부는 타협안을 내놔지만, 교수들을 만족시

키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시위 진압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수 8백 명이 일요일 강의를 거부했다. 또, 교수 2백여 명은 카이로 대학교의 본 교에서 시위를 열었다. 카이로 남부에 있는 헬완 대학교 학생들은 이들을 지지하는 연대 시위를 벌였다. 대학 교수들의 투쟁을 주도한 것은 반전 운동으로 급진화한 새 세대 대학 강사 활동가들이었다.

대학자치회의 모하마드 압둘 가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 공학, 과학 학부의 교수들 중 약 95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오늘 강의가 없는 교수들도 파업 대열에 함께했다.”

대학 강사들의 단체는 ‘3월 9일 운동’으로 불린다. 2003년 3월 카이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전 시위 와중에 결성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사들도 반무바라크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주 이집트 의사회는 두 시간 파업을 호소했지만 무바라크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의사들은 의사회 건물에서 7일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그들은 무바라크 정부가 취약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에 공무원들은 임금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철강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월 말에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철강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이것은 이집트 노동자 파업 투쟁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파업 물결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번 주말에 전 세계 반전 활동가들은 카이로 반전 회의에 참석해 중동에서 어떻게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당신들의 세계, 당신들의 꿈 (1)

[편집자 주] 이 글은 중국 사회주의자 천둥이 보내온 글의 앞부분으로 나머지는 다음 호에 실을 예정이다.

천둥은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고발한다. 다음 호에서는 중국 노동자·농민 투쟁의 부상을 소개할 것이다.

천둥(陳東)

얼마 후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다. 그런데 한 줌밖에 안 되는 고관대작들의 세계와 꿈이 과연 평범한 민중의 세계와 꿈과 같을까?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웹사이트는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소한 올림픽”이다. 검소? 베이징 올림픽은 초호화 체육관을 짓기 위해 이미 38억 달러(약 3조 8천억 원)를 썼다.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다! 8년 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은 15억 달러를 썼는데 그 두 배 이상인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표 값 최고가는 1만 위안(1백40만 원)이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평균 입장료(약 1백 위안 = 약 1만 3천9백 원)가 일반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겨우 1천 위안 정도의 월급을 받는 1억 5천만 민공[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 공식적으로는 도시 거주권이 없다]은 지불할 수 없는 가격이다. 정부의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민공은 순전히 도시에 와서 일하는 기계로만 여겨졌을 뿐, 그들의 임금이 도시 소비를 뒷받침해 주리라는 기대는 없다. 4천만 실직 국유기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세계는 극도로 빈곤한 세계이고, 이들의 꿈은 올림픽을 보기 위해 혹은 “단결, 우애, 진보, 화합”을 느끼기 위해 표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꿈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개혁개방 30년 결산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은 관영 언론도 고도 경제성장이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켰음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사유화를 단행했다. 공식적으로 결코 인정한 적이 없지만 말이다. 처음엔 주로 중소형 국유기업을 [민간 자본가에] 팔아버리거나 대형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바꾸었다. 두 번째 시기 사유화의 대상은 국유기업 토지를 포함한 도시의 토지였다. 세 번째 시기 사유화 대상은 바로 농민의 승포지[承包地, 청부 경작지]였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이 계속됐고 관료와 자본가들의 탐욕이 점점 커지면서 농민의 저항도 점차 격렬해졌다. 10년 동안 관료와 자본가에게 토지를 뺏긴 농민의 숫자가 4천만 명에 이른다. 강제수용에 따른 이익 중 농민에게 돌아간 것은 5~10퍼센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관료와 자본가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은 수탈당한 반면 관료와 자본가는 폐돈을 벌었다. 이것

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의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이 비율은 1980년에 17퍼센트로 이미 하락세였지만, 시장화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계속 하락해 2004년에는 11퍼센트에도 못 미쳤다.

2007년 2월 세계은행의 《중국 경제 분기별 보고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집약 공업이 여전히 주도적인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최근 0.5에 도달했거나 혹은 초과했다. 30년 전 중국은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변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당연히 관료와 자본가의 주머니로 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계’이고 ‘그들의 꿈’이다. 10년 전 세간에 유행했던 노래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15등급의 사람들

1등급 : 실권을 장악한 사람들, 메모하고 동그라미만 쳐도 바로 돈이 들어오네.

2등급 : 불법 경영으로 폭리를 취하는 국유기업 관료들, 공문서를 바꾸고 그래프를 바꾸네.

3등급 : ‘백’[연줄] 있는 사람들, 명당자

리를 차지해 돈을 버네.

4등급: 법관들, 원고 돈을 먹고 나서 피고 돈을 먹네.

5등급: 교통경찰, 길 위에서 돈을 먹네.

6등급: 공공교통 운전자, 시동 걸 때마다 돈을 요구하네.

7등급: 관광 가이드, 사시사철 커미션을 먹네.

8등급: 개체호[幹個體, 도시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 장씨와 이씨[중국에서 가장 흔한 성. 장삼이사, 즉 평범한 사람을 지칭]를 속이고 돈을 버네.

9등급: 전력국 직원, 뇌물을 갓다 바치지 않으면 바로 스위치를 꺼버리네.

10등급: 의사, 뱃가죽을 열어놓고 돈을 달라 하네.

11등급: 세금관리, 고지서를 막지 않으면 재수 없는 일 당한다네.

12등급: 교사, 일년 내내 임금이 체불된 다네.

13등급: 노동자, 공장이 문 닫아 먹고 살 수 없다네.

14등급: 농민, 양식을 건네주고 영수증만 받는다네.

15등급: 민공, 어디가 종착지인지 알 수 없다네.

노동자와 농민의 빈곤은 개인 소비를 무력화하고 국내 시장을 축소시켰다. 돈 있는

사람들의 소비만으로는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보고서도 중국 국내 소비의 장기 하락의 원인을 임금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것에서 찾는다.

빈부격차

한편, 거대한 부를 축적한 관료와 자본가들은 사치품 소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돈을 자본 축적에 지출했다. 그래서 GDP 대비 개인 소비의 비율은 계속 하락했고, 총고정자본형성율은 오히려 계속 상승해 최근 몇 년 동안 40퍼센트를 초과했다. 이 수치는 20퍼센트 미만인 미국의 두 배 이상일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축적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제조업에서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생산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이 사지 못한다면 외국인들이 사게 하자.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악착같이 수출에 매달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GDP의 거의 70퍼센트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같은 인구 대국에서 비정상적인 일이다.

또, 자본가 계급의 돈은 점점 불어나 단지 상품 수출만으로 과잉 자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게 됐고, 과잉 자본의 수출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밖으로 나가자’는 전략이 나온 배경이다.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해외 투자는 몇 배나 증가했는데,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 경로를 따라 국외로 마구 흘러갔다. 이 돈은 먼저 홍콩으로 흘러갔는데, 만약 대륙 자금이 빠지면 홍콩 주식과 부동산은 바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마카오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농촌이 자본 부족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고, 중국 서북과 서남부 같은 낙후 지역도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데 반해 중국의 관료와 자본가는 오히려 필사적으로 자본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들만의 꿈 베이징 올림픽 - 스타디움을 지은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개막식 표 구입은 꿈도 못 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②

[편집자]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방한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이라는 주제로 대중 강연한 것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다.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시애틀 시위 이후로 발전한 세계적 인 반신자유주의·반전 운동이 가장 멀리 나아간 곳은 라틴아메리카다.

특히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세계적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해 UN 총회에서 차베스가 부시를 악마로 묘사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또, 차베스가 권장한 노움 촘스키의 책은 아마존 1위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차베스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 지난해에 나는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카이로 회의에 참석하러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이집트 활동가들은 이슬람주의자이든 세속적 민족주의자이든 라틴아메리카가 반제국주의 투쟁의 본보기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도전이 특히 두 라틴아메리카 나라에서는 단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收入)을 상당 부분 사회복지에 지출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좌파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당선 직후 볼리비아의 천연가스를 국유화했다.

21세기 사회주의

모든 것이 사유화돼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국유화는 구시대적 발상이고 사회주의는 죽은 사상이라는 통념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다.

그럼에도 두 좌파 정부 모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차베스는 지난해 12월의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새 헌법이 부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 깊이 다루기 전에 지난 수십여 년에 걸친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는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내전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좌파들이 득세했고 1959년에는 그 유명한 쿠바 혁명이 일어났다. 사실, 쿠바 혁명보다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곳에서 일어난 노동자 대중 투쟁이 더 중요했다.

국제적 반제국주의의 상징이 된 차베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반란과 반혁명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저항으로

그러나 좌파들의 이러한 약진은 미국을 등에 업은 라틴아메리카 지배자들에게 처참하게 분쇄당한다. 나라마다 쿠데타가 일어났고 극도로 억압적인 정권들이 좌파를 고문하고 탄압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1973년과 1976년에 일어난 쿠데타가 가장 악명 높은 사례들이다. 심지어 과테말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군대가 원주민 농민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반혁명은 당시의 세계경제 위기와 상호작용했다. 1982년에는 소위 '외채 위기'가 멕시코에서 시작됐다. 갑자기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그동안 서구 은행으로부터 빌려왔던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 기관과 미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배자들은 이 외채 위기를 이용해 모종의 경제적 반혁명을 수행했다.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것이 그 반혁명의 실체다. 즉,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공공부문을 허물고 시장을 외국 상품과 자본에 개방시켰다. 그 결과 전 대륙에 걸쳐 고통과 가난이 급증했다. 일례로 볼리비아의 광업이 붕괴하면서 역사상 가장 투쟁적인 노동자 운동에 속했던 볼리비아 광원 운동이 사실상 파괴됐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저항의 주기가 시작됐다. 1994년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봉기가 그 발단이었다. 그 봉기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일어났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타이밍이었다.

사파티스타 봉기에 뒤이어 라틴아메리카 각지에서 일어난 투쟁들은 규모가 훨씬 컸다. 예컨대 2001년 말 아르헨티나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 위기의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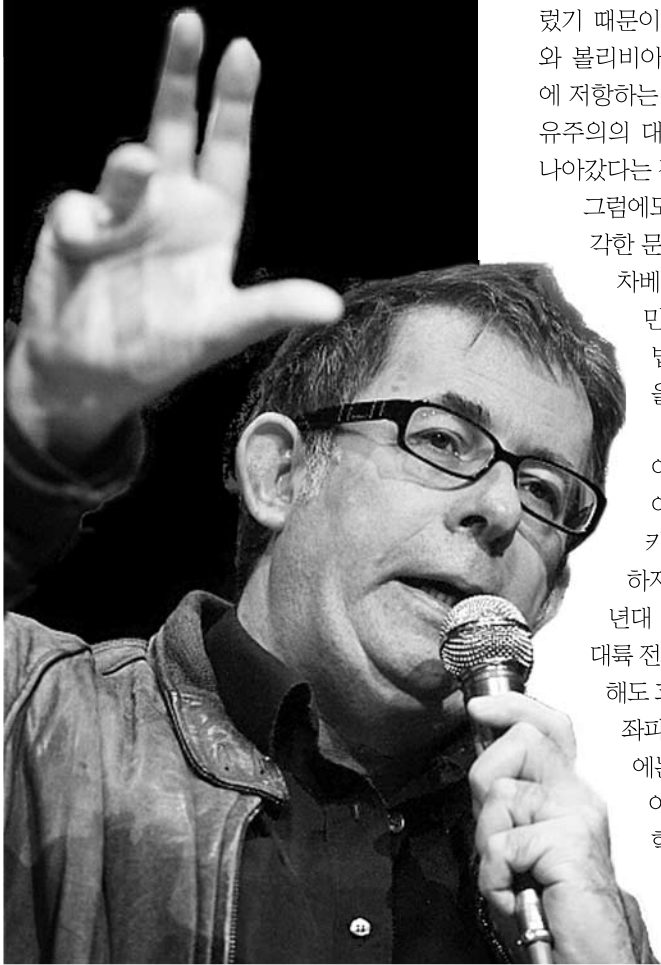
로 어마어마한 대중 반란이 일어났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반감을 보여 주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중도좌파 정부들의 잇따른 집권이다. 지난 10년 동안 베네수엘라·브라질·우루과이·칠레·볼리비아·에콰도르에서 좌파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들 정부의 대다수는 막상 행동으로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업고 집권했는데도 이들은 전임자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답습했다. 툀라 대통령의 사례가 가장 시사적이다.

툴라는 브라질 노동자당 지도자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1970~1980년대의 거대한 노동운동을 통해 탄생한 대중적 좌파 정당이다. 툀라는 극빈층 출신으로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으로 손꼽히는 브라질 노동자 운동을 이끈 진정한 노동계급 인사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브라질 대통령이 된 후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배신했다. 그는 전임자들이 추진한 것과 매우 비슷한 정통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실행했다. 비록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과 더 각을 세웠지만, 아이티에 브라질 군대를 파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시 정부와 협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림에 비춰 봤을 때 차베스와 모랄레스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그들은 다른 좌파 정부들보다 훨씬 급진적인 정책들을 폈고, 그 때문에 툀라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겪었다. 모랄레스가 볼리비아의 천연가스를 국유화했을 때 피해를 본 외국 기업들 가운데는 브라질 기업도 있었다. 툀라는 볼리비아 민중이 이처럼 자기 나라 자원을 스스로 통제하려 한 것에 맞서 브라질 기업을 편들고 나섰다.

» 8면으로 이어짐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

» 7면에서 이어짐

그렇다면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왜 다른가? 어쩌서 모랄레스와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들에 비해 그토록 급진적인가? 근본적으로는, 차베스와 모랄레스가 자기 나라 대중 운동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빈민들의 대중 운동은 베네수엘라보다 볼리비아가 앞서 있다.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코차밤바 지역의 강력한 대중 투쟁이 있었고, 코카 재배농(코칼레로스)들의 운동도 있다. 코카 재배농들은 다른 수많은 전쟁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도 치렀던 미국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악의 축”이다. 하지만 볼리비아 코카 재배 농민의 다수는 실직한 광원들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은 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요량으로 코카 재배를 시작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시장 논리를 충실히 따른 셈이다. 코카인은 국제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는 상품이다. 따라서 볼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코카를 재배하는 극빈자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을 종용해 코카 재배농들을 박멸하려 해왔다. 이에 맞서 볼리비아에서는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코칼레로스들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급진적

엘알토는 볼리비아의 빈민들이 밀집해 있는 거대한 슬럼 도시로서, 수도인 라파스가 내려다보이는 고원 지대에 위치해 있다. 코칼레로스 운동이 한창일 때 바로 엘알토에서 거대한 시위들이 터져나왔다. 특히 2003년과 2005년에는 엘알토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라파스로 향하는 교통을 차단했다. 그 때마다 우파 대통령이 한 명씩 사임했다. 2년 사이에 대중 운동이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대통령을 몰라나게 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한국에서도 볼리비아처럼 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2005년의 제2차 봉기 때는 천연가스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도로 봉쇄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핵심 요구는 천연가스 국유화였다. MAS(사회주의운동당) 지도자인 모랄레스는 사실 대중 운동의 오른쪽에 있었고 국유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 운동의 힘이 그를 왼쪽으로 밀어붙였고, 또 권좌로 밀어올랐다.

이에 비해 차베스는 본인이 훨씬 더 많은 주도력을 발휘했다. 그가 1999년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대중 운동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오로지 베네수엘라 빈민들의 조직적 지지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2002년 4월, 우파들이 부시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차베스 축출을 위한 쿠데타를 감행했을 때였다.

쿠데타 세력은 주요 경제단체 회장을 신임 대통령으로 내정해 두기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의 쿠데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 대중에게 썩 다른 환영을 받았다. 판자집으로 뒤덮인 고산 지대에서 빈민들이 쏟아져 내려와 대통령궁을 포위한 채 차베스의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찍은 다큐멘터리 한 편이 이 과정을 생생히 보여 준다. 다큐멘타리를 보면, 대통령궁 바깥에서 가해지는 압박이 거세질수록 점점 불안 초조해지는 쿠데타 세력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차베스는 빈민들의 지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인지 그는 빈민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려 했다. 그는 부시에게도 약간은 감사해야 한다. 부시 그 명령이가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유가 폭등을 초래했고, 고유가 덕분에 차베스는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령들이 추구해온 것과 비슷한 정책들을 쌍수 들고 반길 우파들도 있고, 쿠바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모델로 여기는 자들도 있다.

경종

그런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차베스 정부가 보인 행보는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익의 준동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차베스 지지자들은 PSUV(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라는 당을 창립했다. PSUV는 5백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어마어마한 정당으로서, 차베스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광범한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명백히 대다수 차비스타들은 PSUV를 상부의 지시를 대중에게 하달하는 창구 정도로만 여긴다. 정당과 대중 운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정당이 기존 대중의 주도적 행동으로

부터 힘을 얻고 교훈을 도출한다는 관점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베스가 발의한 새 헌법도 비록 훌륭한 개혁 조치가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연임 제한을 없애고 포고령으로 통치할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등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12월 2일의 국민투표에서 우파는 이 헌법에 극렬히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고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우파는 부전승으로 이긴 것이지, 여론이 그들 편으로 확 기울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새 헌법에 대한 반대표수는 2006년 대선에서 우익이 얻은 표보다 약간 더 많았을 뿐이다.

그에 반해 찬성표는 2006년 대선에서 차베스가 얻은 표보다 3백만 표나 더 적었다. 심지어 차베스의 신당인 PSUV가 입자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달리 말해 차베스가 진 것은 차베스의 지지자 중 다수가 국민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 관찰자는 국민투표 결과를 “차비스타 엘리트에 맞선 차비스타 거리의 반란”으로 묘사했다.

차베스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불거진 인플레이션, 식료품 부족, 관료들의 부패 등의 문제들에 불만을 품고서 국민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차베스에게 벌을 준 것이다. 이는 재앙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좌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사태 전개다.

1973년에 칠레 민중연합 정부의 아옌데 대통령(우)은 자기가 임명한 피노체트(좌)에게 쿠데타를 당했다

차베스와 모랄레스의 선택은?

— 칠레의 교훈과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선택

불행히도 차베스는 이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도출해 급격히 우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래 몇 차례 연설에서 혁명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자신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차베스는 여러 면에서 참 훌륭한 인물인긴 하다. 그는 매주 <엘로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핵심 현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밝히며 대중과 소통하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잘못된 메시지를 소용하려 하고 있다. 그는 대자본과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대자본과 연줄이 있는 군 장교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특히 2002년 4월의 쿠데타 주도자들을 사면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는 일단 우익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행보이다. 우익은 ‘봐라, 우리가 차베스에게 한 방 먹이니가 저렇게 꼬리를 내리지 않느냐, 더 세계 한 방 날려보자’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차베스의 지지자들만 사기 저해된다.

또한 자본가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식료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 는 안 된다. 자본가들이야말로 그러한 문제를 초래한 주범들이다.

어떤 점에서 차베스가 하려는 일은 1972~1973년 칠레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칠레에도 좌파인 민중연합 정부가 있었다. 민중연합 정부를 이끈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도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회 개혁을 시도했다. 불행히도 아옌데는 자신의 지지 세력은 약탈한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칠레 노동자들이 아옌데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코르돈’이라는 방어 조직들을 건설한 것이다. 군대 사병들도 그런 조직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아옌데는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풀어말리고 우익에게 양보했다.

일례로 그는 정부와 우익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있을 듯한 인물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그가 바로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9·11 테러”로 아옌데를 비롯한 수천 명의 좌파들이 폐죽음을 당했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대 후반 니카라과에서도 좌파인 산디니스타 정부가 점점 거세지는 압박에 직면했다. 레이건 정부의 후원을 받은 우익 게릴라 ‘콘트라’가 산디니스타 정권을 공격했다. 이에 산디니스타는 정책을 온건하게 바꾸

고 더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도입하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산디니스타 정부를 구원해주기 는커녕 1990년 선거에서 산디니스타가 패배하는 길을 열었다.

나는 차베스가 우익 쿠데타로 제거되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차베스는 엄청난 지지 기반을 가진 지도자로서, 두 차례의 대선과 우익이 조직한 한 차례의 신임투표를 버텨낸 사람이다. 부시 정부가 차베스를 그토록 증오하는 이유 하나는 그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좌파라는 점이다.

부시 정부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우익의 전유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네오콘들은 ‘사실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법치’라는 논조의 책을 쓰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확산이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차베스 같은 ‘선동꾼’들이 민심을 현혹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명의 대륙

차베스가 처한 여건은 아옌데가 1972년에 처했던 여건보다 훨씬 유리하다. 모랄레스와 차베스 모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생산국을 통치한다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한없이 오르기만 하지는 않는다.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지금으로서는 경제적 입지가 유리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이점일 뿐이다.

문제는 차베스와 모랄레스가 남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두 지도자 모두 옛 자본주의 국가의 관료와 대중 운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줄타기가 아무리 신기에 가깝다 해도(차베스의 경우 정말 신기에 가깝다)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어느 순간 그들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좌파들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들이 온 몸을 던져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자기해방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그 편을 선택했을 때, 라틴아메리카는 단지 위대한 혁명가들의 땅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의 대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혁명은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윤이 따라 온다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2005년 신자유주의 정부를 몰아낸 볼리비아 대중 투쟁

국가 관료와 대중 운동 사이에서

그러나 차베스와 모랄레스는 그들이 대중 운동과 맺고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본주의 국가를 찬양하고 있다. 달리 말해, 그들은 위계적이고 관료적이며 부패한데다 억압적인 국가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베스는 군부의 수장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교를 임명했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또한 차베스와 모랄레스 모두 지배 엘리트들의 악랄한 반격에 직면했다. 가령 베네수엘라의 지배 엘리트들은 2002년과 2003년의 쿠데타 기도가 실패하자 기업주들의 폐업을 조직해 석유 산업을 몇 달 간 마비시켰다. 또, 볼리비아의 지배 엘리트들은 모랄레스가 새로운 민주 헌법을 제정한 것에 반발해, 자신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석유·가스 매장

지역을 볼리비아로부터 독립시켜 주지 않을 거면 내전을 각오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 대치에는 인종차별적인 면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배 계급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식민 세력의 후손으로서 대체로 백인들이다. 반면, 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유럽에 정복당한 원주민의 후손이거나 유럽인들이 데려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대중 운동은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원주민과 흑인의 자기 권리 찾기 운동인 측면도 크다. 이들 나라의 지배 계급은 대통령이 원주민 출신이라는 점을 끔찍이도 혐오한다.

이 자들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중남미 대륙을 피로 몰돌였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반혁명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그러한 위협을 몰라치려면 대중 운동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기존 국가를 타도하고 대체할 노동자 권력 기관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좌파들이 추구하는 정치 전략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차베스의 정치 성향을 보자면, 분명 그는 대통령이 된 뒤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이 급진화했다. 그는 좌파 민족주의자로서 집권했지만 그동안 맑스주의 이론서들을 여러 권 탐독했고 연설 중에 트로츠키를 자주 찬양했다. 또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생산 방식들을 실험하고 장려했다.

차비스타(차베스 지지자) 운동 내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세력들이 혼재해 있다. 그 중에는 볼라나 기타 중도좌파 대

» 9면에서 이어짐

청중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리

먼저, 이랜드 노동자 동지의 감동적인 연설에 감사한다. 이랜드 동지들의 투쟁 승리를 기원한다.

둘째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노움 촌스키가 중남미에 대해 쓴 것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하지만 차베스가 나오미 캠벨과 사귄다는 비난에 맞서 차베스를 방어하고 싶다. 차베스는 단지 나오미 캠벨의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다. 정작 슈퍼모델과 결혼하겠다는 자는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이다.

더진지한 질문으로 옮겨 가자면, 우선 쿠바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쿠바에서는 카스트로와 그의 동료 체 게바라가 소규모였지만 영웅적인 게릴라 부대를 결성해, 1958년과 1959년 부패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권을 전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쿠바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됐다. 특히 체 게바라는 여러 세대 동안 영웅이 됐다.

그럼에도 사실 쿠바 혁명은 다수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권력을 장악한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는 1969년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브라질 노동자운동 등의 부상이 중남미 대륙에서 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데서 일말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좌파의 염원은 대중의 자기해방이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쿠바의 카스트로

L군가가 유가는 항상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이를 좀 먹은 덕분이겠지만 내 경험에 비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물가상승의 효과를 제거한 실질 유가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때는 이란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80년대 초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1990년대까지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사이어나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덕에 유가가 눈에 띄게 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유가가 늘 오르기만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전략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바로 지난주만 봐도 미국의 경제침체 전망으로 인해 유가가 제법 하락했다.

차베스와 모랄레스가 중국, 러시아와 맺은 동맹은 단기적인 전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미국 제국주의와 대적하고 있는 좌파 정권으로서의 동맹국을 선택하는 데서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18년 독일군이 혁명 직후의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레닌은 기꺼이 영국과 프랑스 강도들로부터 총과 음식을 빌려

쓰자고 했다. 나는 차베스가 이란 정권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어찌다 적대 관계에 놓인 자본주의 정권과 동맹하는 것만으로 혁명 전략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차베스와 이란 대통령

부패 문제로 넘어가자. 좌파가 자본주의적 이권에 의해 부패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 좌파의 정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한 사회학자는 브라질 노동자당 지도자들과 노조 관료들이 2002년에 정권을 잡기 전부터 이미 일부 브라질 자본가들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톨라가 브라질 자본과 화해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브라질 대자본과의 타협을 수반하는, 국가를 통한 개혁의 길을 추구한 톨라와 그 동료들의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한 일이다.

나는 차베스가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는 부귀영화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본주의 국가의 관리자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국가에 차비스타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차비스타 관료들은 온갖 부패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한국보다도 빈곤이 훨씬 만연한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난한 노동계급 출신으로 국가 관료가 된 사람들에게는 관료적 특권이 나 기업인들의 뇌물이 주체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

차비스타 관료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노동조합 지도자

베네수엘라에 살면서 그곳에 자녀까지 둔 미국인 동지는 우리 중 누구보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지의 두 가지 반론에 답하자면, 첫째 나는 인플레이션과 식료품 부족의 원인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식량부족과 인플레이션이 부분적으로는 차베스를 궁지에 빠뜨리려는 자본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

다고 한다. 어쨌든 간에 민간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경제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식료품 부족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오직 경제에 대한 민중의 사회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차베스 자신도 1990년대의 쿠데타 실패 이후 풀려났었기 때문에 음모자들을 풀어 줘도 괜찮다는 식의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슨 스포츠 게임처럼 여기는 태도다. 영국에는 크리켓이라는 과장망측한 게임이 있는데, ‘페어플레이’에 대한 집착이 이 게임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리켓 게임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차베스를 풀어 줬다고 해서 차베스가 그들을 풀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지배 엘리트들은 ‘1992년에 차베스를 풀어 준 멍청이가 대체 누구야? 그 때 그 놈(차베스)의 머리통에 총알을 박았어야 했어!’ 라고 통탄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2년의 우익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들은 필경 차베스의 머리에 총알을 박았을 것이다. 이것은 권력 투쟁이다. 권력 투쟁에서는 적을 상대로 페어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도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실패한 우익 쿠데타

또한 질문자는 국가는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의아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급진 좌파 사이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다. 멕시코 거주 영국인 맑스주의자존 홀러웨이를 뜻함]가 쓴 책 이름에서 따 온,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는 구호인데, 달리 말해 국가가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2005년에 멕시코에 갔을 때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국유화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좌파들과 토론한 적이 있다. 국유화는 국가에 의한 행위인데 우리가 왜 국가를 끌어들이야 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아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대중 투쟁이 정부에 개혁을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의 역사 전체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 국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강압적인 기관들의 집합체로서 조직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차베스에 대한 군부의 반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973년 쿠데타가 시작했을 때 아옌데는 “피노체트 장군의 신변에 별 탈이

없어야 할 텐데” 라고 말했다. 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피노체트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피노체트가 아옌데를 살해했다. 나는 차베스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 그의 장군들이 그를 죽이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베네수엘라 대중과 빈민들이 기존 국가를 타도하고 그들 자신의 국가로 대체하는 것밖에 없다. 새로운 국가를 창조해야만 기층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베네수엘라 대중이 국가를 자신의 동맹으로 여기지 말고 국가와 정면대결을 불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는 국가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쇄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접수한 베네수엘라 공장

우리가 차베스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우파와 지배 엘리트, 쿠데타 세력, 그리고 부시에 대항해 우리는 차베스를 지지한다. 차베스는 영웅이다. 하지만 영웅에 기대서는 사회를 변혁할 수 없다. 차베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는 자신을 대체할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단지 또 다른 영웅이 아니라 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대중 민주주의가 그를 대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하겠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라는 표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20세기의 실패한 스탈린주의 정권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올바른 의도인 것 같다. 나는 그에 덧붙여 사회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21세기에 더 유효하다고 확신한다.

맑스가 1848년 《공산주의 선언》을 썼을 때 산업 자본주의는 서유럽과 미국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 자본주의는 진정 세계적인 체제이며 세계 인구의 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맑스가 예언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그가 살던 19세기보다 오늘날의 모습에 훨씬 더 부합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맑스가 꿈꾸었던 가능성, 즉 세계 노동계급이 쟁취할 국제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좌파 정부의 중요성은 그들이 우리에게 그 꿈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어렵듯이 보여 주기 때문이다. 카라카스의 빈민들이 차베스를 구했을 때, 엘알토의 빈민들이 볼리비아의 우파 대통령 두 명을 연달아 쫓아냈을 때, 진정한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정당하다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심장”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뮌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셀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뮌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정진희

이명박은 최근 여성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이 지위 향상이나 양성 평등 등의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거뒀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의 ‘747 공약’만큼이나 대허풍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4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2006년). 여성은 산업에 따라 남성보다 24~48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남녀 임금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96년 39퍼센트에서 고작 5퍼센트 줄었다. 올해 세계노총이 발표한 ‘성별 간 임금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네 번째로 성별 임금격차가 크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세계 평균(15.6퍼센트)의 2배가 넘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미 1989년에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됐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심각한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우선, 고용주들이 법을 간단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1980년대에 널리 퍼져 있던 남녀분리호봉제를 고수한다. 전경련 회장 조석래가 그룹 총수인 주식회사 효성의 울산 공장은 아직도 남녀분리호봉제를 실시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데도 남성 임금의 60퍼센트만을 받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것도 남녀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요인이다. 물론 비정규직 차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규직이 되기 쉽다. 5인 미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까지 합하면 비정규직의 77.7퍼센트가 여성이다.

분리

남녀 임금격차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때문이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종보다 주로 여성이나 주로 남성이 근무하는 직종이 9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보건·간호, 초등·학령전 교육, 비서, 섬유봉제, 청소 등 ‘여성 직종’은 대부분 임금이 매우 낮다.

초등학교 교사 같은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직종일수록 그 직종의 평균임금은 낮다. 여성 취업자의 64.2퍼센트가 임금 10등급 중 하위 3개 분위에 속하는 일자리에서 일한다(2004년).

성별 분리는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도 여성이 주로 하위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남녀 임금격차를 낳는 또 다른 요인이다. 여성은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에 부딪히곤 한다. 2007



유통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장시간·저임금 노동자다

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8.1퍼센트에 불과하다. 1천 명 이상을 고용하는 5백46개 사기업과 정부 부처, 공기업의 여성 임원진 비율은 3.3퍼센트로 더욱 낮다.

많은 봉급을 받는 극소수 여성들조차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데, 더 낮은 직위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여성 노동자의 40퍼센트 이상이 아예 직급이 없다.

사무금융직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입사부터 지속적인 승진 차별을 받는다. 사무금융연맹에 따르면, L손해보험사의 경우 2006년 남성 대리 진급 대상자의 승진율이 74퍼센트인 데 비해 여성은 겨우 10퍼센트였다.

최근 몇 년 새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리직군제도 여성차별 제도다.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새로운 대안처럼 선전되지만, 사실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5년 전에 폐지한 여행원제의 부활이다.

제2금융권인 대한생명은 전체 직원 중 절반인 여성을 사무직군, 남성을 일반직군으로 분리하는데, 사무직군은 일반직군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28년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연간급여가 3천1백57만 원인 데 비해 일반직군 남성 신입사원의 연간급여는 3천2백24만 원이다.

‘교직의 여성화’가 논란되는 학교에서도 대다수 여성은 낮은 지위에 있다. 교

장, 교감 같은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은 15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여교사의 비율은 현저히 낮고, 기간제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다(전교조). 여교사 비율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지는데, 2007년 여교수의 비율은 전체 교수 중 19.3퍼센트에 불과하다.

차별

시장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실이 여성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별 직종분리는 여성이 특정 직업을 선호한 결과이고, 하위직 집중 현상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교사는 여성에게 적합하고 건축 기사는 남성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천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가정 등에서 ‘바람직한’ 성역할을 습득한 결과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성 차별적 편견일 뿐이다. 고학력 여성조차 같은 학력의 남성보다 낮은 임금과 승진 누락의 차별을 받고, 남성과 동일한 일이나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할 때조차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지향적’이어서 작업 스케줄이 유연

한 직업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여성이 보통 작업 시간이 ‘유연한’ 일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기 때문이지, 여성이 특별히 남성보다 ‘가족지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은 차별 임금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낳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항상 고용주들은 일하는 어머니들을 차별한다. 임신한 여성의 채용을 꺼리거나 유급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퇴직을 유도하곤 한다. 관창은 보육 시설 부족과 저임금 대비 높은 보육비 부담도 여성의 취업 회피나 퇴사를 부추긴다.

그럼에도 여성이 가정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성의 80퍼센트가 취업을 원한다(《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출산 때문에 취업률이 급감하는 30대(특히 30~34세) 때조차 50퍼센트 이상의 여성은 계속 일한다(2005년). 40대가 되면 20대 후반의 취업률(66퍼센트)을 거의 회복한다.

그러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은 여성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남녀 임금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데, 여기에는 경력 단절뿐 아니라 편견(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도 함께 작용한다. 20대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90퍼센트가 넘지만, 40대와 50대 여성은 6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2007년).

남녀 임금 불평등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나라(북유럽을 포함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기업주들과 정부는 여성 차별을 통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한다.

오늘날 여성 취업은 갈수록 늘어나지만(여성 노동자는 노동인구의 40퍼센트를 넘어섰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노동운동 내에서도 차별 임금을 없앨 수 없다는 비판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힘든 조건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도전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KTX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고, 사무금융연맹은 분리직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효성 울산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여전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여성 노동자들의 평등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다. 그것은 또한 남녀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뉴코아·이랜드, 효성, 대한생명 노조 등에서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대될 때 차별 임금을 날려버릴 날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옹호하라

김용욱

티베트 민중 항쟁이 벌써 3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항쟁의 발원지인 라싸의 상황은 대규모 중국 점령군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쓰촨성 등에서는 아직도 독립 요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진보 인사, 조직, 정당 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의 항쟁을 지지하고 티베트 연대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티베트인들의 항쟁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경제적 관계에 정권의 운명이 걸린 몇 안 남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은 중국 정부의 학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 이번 사태는 불법분자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폭력 범죄 사건[으로] 티베트의 안정과 티베트인들의 이익을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쿠바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스탈린주의 정치의 잔재를 갖고 있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도 아쉽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에 마오주의자들은 마오쩌둥 시대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라고 오인해 중국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했는데, 일부 마오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듯하다. 예컨대 마오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인도의 한 마오주의 공산당(인도 공산당 맑시스트-레닌파) 핵심 활동가는 최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점령이 ‘진보적’이라고 주장했다.

참목

물론 스탈린주의(마오주의도 그 일종이다)의 유산을 간직한 좌파들만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제국주의가 베이징 올림픽을 사보타주하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전 세계인들은 제국주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 그는 중국을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티베트 사태로 중국이 약화돼 미국 제국주의가 이득을 챙기는 상황을 우려한다.

티베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의 친서방적 성향 때문에 티베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 온갖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온 서방 정치인과 정부 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티베트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도 티베트 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낸 진보 단체들의 수는 매우 적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첫째, 중국과 북한 정부의 주

장과 달리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당원계시판에서 한 당원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우리는 신라나 백제이니 독립하겠다’고 하면 독립을 시켜야 하는가”고 다함께에 물었다. 그러나 전라도나 경상도와는 달리 티베트는 1951년 중국군이 강점하기 전까지 한족 정권과는 독립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티베트 역사 전문가 처링 사키야는 전근대 시대에 중국 왕조와 티베트 왕조가 일종의 군신(君臣) 관계를 맺었음에도 중국 왕조가 주변국과 맺은 책봉(冊封) 관계처럼 형식적인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911년 청왕조가 붕괴한 뒤부터 1951년까지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조차 없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이 1951년 티베트를 점령한 뒤부터였다.

마오주의자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왕조를 무너뜨려 ‘티베트인들을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근대 문명을 도입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아시아의 봉건 왕조들을 무너뜨리고 ‘대동아공영권’을 만든 것도 환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인들을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티베트인들을 대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억압했고, 불교 사원의 90퍼센트 이상을 파괴했다. 티베트인은 한쪽에 비해 일자리, 의료, 주거, 교육 등 거의 모든 중요 분야에서 차별받았다. 그래서 티베트 청년 실업률이 거의 70퍼센트에 달하며, 한쪽은 무료로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지만 티베트인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2007년에만 무려 25만 명의 티베트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그 비용을 티베트인들이 부담하게 했다.

둘째, 어떤 좌파들은 이런 만행을 인정하면서도, 부시 정부나 서방 정부가 티베

트 항쟁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좌파들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티베트 항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 정부조차 미국이나 서방 정부가 티베트 항쟁을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물론 과거 1950~1960년대 미국 CIA가 티베트 독립 운동에 개입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존재하던 티베트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이용하려 한 것이었지 배후 조종으로 그런 대중적 분노와 저항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1959년에 티베트인들이 라싸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미국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중국 점령자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티베트의 사태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1960년대 말부터는 티베트에 대한 개입 시도를 중단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계속 저항했고, 1969년, 1987~1989년에 대규모 항쟁이 일어났다. 항쟁으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죽어갈 때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티베트인들의 독립 요구를 지지한 적이 없다.

제국주의간 갈등

셋째, 중국 국가가 미국 제국주의 반대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으므로 티베트 저항을 지지해 중국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차베스식 주장도 옳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정부는 매우 많은 쟁점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협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마음껏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국 노동자들을 억눌러 왔다. 또, 1990~2000년대 UN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파병 활동을 거듭 승인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이 갈등을 표현할 때 스탈린주의자들답게 종종 좌파적 수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갈등의 진정한 성격은 제국주의 내부의 갈등이다. 비슷한 예로, 20세기 초반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열강들은 서로를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자신 이야말로 아프리카·아시아·발칸반도에 민족해방을 가져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민족해방과 자유를 외쳤지만 진정한 목적은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해 중국 제국주의를 두둔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사고다.

달라이 라마

넷째, 운동 지도부[달라이 라마]의 정치 때문에 티베트 항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도 옳지 않다. 물론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주의와 굴종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런 비판은 티베트 민족해방 운동의 진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예컨대 이번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이 ‘폭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망명 정부 수반에서 사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중국군의 무차별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해로운 발언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하기보다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또, 그는 서방 정부의 구실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방 정부들은 대(對)중국 압박 카드라는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티베트 문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티베트 민족해방 운동은 서방 제국주의가 아니라 중국 노동자·농민을 동맹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들이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부의 정치가 운동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지도부가 누구냐를 떠나 티베트의 승리는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강대국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 피억압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고무하는 값진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록 차베스가 티베트에 관해 유감스러운 발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제국주의 정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좌파 활동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중요한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일부 사람들이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좌파 활동가들을 마치 반제 투사가 전혀 아닌 듯이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 글이 티베트 문제에 대한 진정한 좌파적 입장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해소하려 하는가

김광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다함께' 운영위원

3월 20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해소를 요구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미 참여연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활동에 불참하고 있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집중해서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을 조직하고 있던 동안에도 참여연대는 예년과 다르게 3·16 행동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참가도 조직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22일 개전 5주년을 맞는 독자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사실상 탈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독자적 활동을 조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해산돼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며 비민주적이기까지 하다. 여러 단체들의 연합체를 소수 단체가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해소돼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먼저,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각 단체들의 활동 관심 사안에서 제외되거나 활동 동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운동 방식도 2004년 이래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2004년 8월 자이툰 파병 이후 한국 반전 운동의 사기 저하로 적잖은 단체가 운동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해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반전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일 뿐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를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이것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과 개인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지지와 후원 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조직하는 중요한 시위의 큰 버팀목이었다. 보통 1백여 개 단체가 지지금을 전해 줬고, 수백 명에서 1천여 명의 개인들이 꾸준히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활동을 후원했다. 그래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부채도 없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20여 명의 개인들이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위해 자원 봉사를 했고, 서명 운동 등으로 모은 이메일 1만여 개에 소식들을 보내 주고 있기도 하다.



이라크전 개전 5주년 집회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전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결집시키며 한국 반전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집회 중심의 운동 방식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중요하다. 그동안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모여 반전 주장을 알리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었다. 반전의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진실

물론 집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급박한 시기에는 집회와 시위가 찾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 자주 조직되는 소규모 동원은 정치적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참가자들을 고무하거나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 이런 행동 위주 방식은 토론과 설득이라는 과정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활동이 대중 집회 동원으로만 이뤄진다면 집회 동원이 쉬운 단체들에게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역효과도 생긴다. 집회와 시위 외에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에 대한 보완점일 뿐이지, 해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참여연대는 또한 “PKO, 미국의 이란 침공 반대 등이 이라크 파병 반대 이름으로 모인 3백51개 단체의 합의된 활동의 대상들인가”라며 “국민행동은 현재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주장도 대체로 진실이 아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그동안 새로운 쟁점이 불거졌을 때 이 쟁점에 대한 합의를 위해 토론을 중시해 왔다. 예컨대, 2006년 여름 레바논 전쟁이 터졌을 때, 토론회를 개최해서 레바논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라는 것과 한국 정부의 레바논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에 대해서도 이미 몇 년 전에 토론회 반전 운동의 의제로 삼고 있다.

PKO 상시파병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 토론회는 아직 개최되지 못했다. 참여연대가 이 토론회의 준비를 맡기로 했는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라는 명칭이 가지

는 제한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 정부의 파병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자체에 맞서 싸우는 연합체로 자리 잡았고, 이것은 반전 운동의 정치적 성과다. 명칭과 형식의 제한이 문제라면 협력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더 적절한 명칭과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의 이유는 아니다.

근시안적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해산을 요구하면서 무책임하게도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발전적 대안이 아니라 파병반대국민행동이라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청산하려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반전 운동의 후퇴를 의미할 뿐이다. 여전히 ‘대테러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지역재건팀)·레바논에 한국군이 파병돼 있고, 이명박 정부는 파병 정책을 더욱 강화해 “상시파병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꾸준히 활동했던 반전 연대체를 해소한다는 것은 반전 운동의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그동안 반전 운동을 지지했던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어떻게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를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이 설득이나 될 수 있을까.

참여연대는 2003년 8월을 떠올려야 한다. 당시 참여연대와 민중연대 등이 주축해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을 해 소시켰다. 이들은 두 달도 안 돼서 부랴부랴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다시 출범시켜야 했다. 비민주적이고 근시안적인 실수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함께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반전 운동에 기여해 온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함께 활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연대가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는 반전 운동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투쟁일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투쟁
연행자 벌금과
고소고발 대응 비용 마련
후원의 밤

연대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밤

3월 22일 저녁 ‘다함께’ 후원의 밤이 3백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뉴코아·이랜드 조합원 동지들,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전교조, 서비스연맹, 텀프연대,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 병원 등의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의 여러 지역위 당원들은 물론 대학생나눔문화, 불교인권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단체 활동가들과 고려대 출교생 등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아름다운 연대의 상징인 뉴코아·이랜드 투쟁처럼 다함께 후원의 밤 역시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밤이 됐다.

영상에 담은 지난 뉴코아·이랜드 투쟁 과정과 구속·수배·벌금 대상인 42명의 다함께 회원에 대한 후원 호소는 참석자들에게 지년간 투쟁의 기억을 되살리며 감동을 주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이랜드 투쟁은 다함께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동지애를 느낀다”는 감회를 전해 줬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은 “다함께는 모든 걸 다 바쳐 이랜드 투쟁에 연대했다. 이주노동자 투쟁에서 적극 연대하는 다함께의 활동은 다른 단체들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누구보다 큰 박수를 받았던 것은

출교 철회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고려대 동지들의 발언이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랜드 동지들의 투쟁은 우리 출교생들에게도 큰 영감을 줬다.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꼭 갖고 싶다.”

우리들의 연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세원

후원의 밤을 통해 1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덕분에 3천만 원 모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시요.

017002-04-078931(국민은행 백은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첩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3월 31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티베트와 사회주의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WSF)에는 다양한 반전·반세계화 세력들과 나란히 붉은색 도포를 입은 티베트 승려들도 반중국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다.

뭄바이 폐막 행진에서 나는 여러 팻말을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는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들고 있던 팻말에는 “A socialist world is possible”(사회주의 세계는 가능하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팻말을 나눠 주자, 티베트 승려들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간단한 이유가 아닐까?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대안적 세계, 해방적인 세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침공과 중국공산당의 억압·학살을 뜻하는 것이었다.

‘나는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을 지지하지 않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의 티베트 승려들

는다. 나는 천안문 항쟁과 중국의 민주화운동, 노동자·농민 운동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할 틈도 없이 나와 그들은 지나쳐 버렸고, 몇 년이 흘러 나는 다시 그들을 TV에서 보게 됐다.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수백 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 세계가 자칭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 학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

국제 ‘인신 매매’ 결혼의 비극

얼마 전, 내가 일하는 복지센터로 한 남성의 커다란 손에 자그마한 여성이 끌리듯 들어왔다. 스물두 살 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그 사십대 남성은 “한글을 좀 가르쳐야겠다”며 이주노동자 한글 교육 신청서를 접수했다.

일주일일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이 복지센터 옆 병원에 다시 왔는데 그 베트남 아내의 코뼈가 흉측하게 무너져 있었다. 아무래도 석연찮아 이것저것 캐물었더니, “말도 안 통하고, 하도 답답해서 그랬다”며 본인이 때렸음을 시인했다. 베트남 아내는 겁에 질린 고양이마냥 두 손과 발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 그 남성이 혼자 찾아왔다. “아내가 도망갔는데 혹시 여기 안 왔

냐”고 하길래, 그러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쏘아 찼다. 그는 “수백만 원 들여 베트남까지 가서 데려왔는데,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텐데,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았을 어린 그녀는 말도 안 통하는 아버지뻘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며 ‘꿈’이 깨져 갔을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가정’을 뛰쳐나가 불법체류자가 됐을 것이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돈 벌어 고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이 꿈마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혼자 남은 그녀의 남편은 손톱 끝이 새까맣도록 야근에 특근을 밥 먹듯 해

고 있다. 중국은 레닌이 그토록 즐기게 옹호한 ‘민족자결권’을 한 치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지배에 맞서 중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구호에는 반드시 ‘티베트 독립’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티베트의 저항과 중국의 운동이 결합된다면 기고만장한 공산당 관료들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중국의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지배를 용인한 미국과, 체첸의 독립을 억제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중국과 사실상 같은 편이다. 티베트의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강대국의 위선에 대해서도 폭로해야 한다.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곧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티베트인을 향해 내뿜는 총구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미래다.

티베트, 그곳에 해방 있오라.

한상원

도 한 달에 1백만 원을 손에 쥐까 말까 하는 마찌꼬바[영세 공장] 노동자였다. 맘에 드는 이성을 만나고,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를 할 시간도 돈도 없어 보였다. 그는 먼 베트남까지 가서 ‘사온’ 아내가 사라진 것을 원통해 했다.

최근 46세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열아홉 살 베트남 신부가 남편의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을 물건 수입하듯 취급하는 야만적인 사회”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낳았다고 했다.

슬프게도, 맞아 죽은 베트남 신부는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베트남에 가서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썼다.

물론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깨부숴야 할 것은 이주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야만적인 사회와 체제일 것이다.

전현정

〈4개월 3주 … 그리고 2일〉 영화평을 읽고

박조은미 동지의 지적처럼 이 영화는 낙태가 불법화된 상황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의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영화평에서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남자 친구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여자 친구 오티리아를 대비시켜 부각시킨 것에는 이견이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다 보니, 오티리아가 언젠가 낙태할 위험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를 같은 여성의 처지이기 때문에 낙태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접근법도 드러난다.

낙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가가 낙태를 불법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비타처럼 몰래, 비싼 비용을 치러가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낙태 수술을 받는다. 죄책감과 고통도 그만큼 더 크다.

그런데 낙태를 여성들만 공유할 수 있는 고통스런 경험 문제로 접근하면 낙태 합법화 지지로 나아가기보다는 남성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단결을 통한 낙태 합법화 쟁취라는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최미진

지난 호에 박조은미 동지가 소개한 영화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은 그의 말처럼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심리들”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낙태가 불법화돼 있는 독재정권 하에서 어린 두 여성은 감옥행을 각오하고 낙태를 ‘감행’한다.

그런데 박조은미 동지가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가비타의 남자친구와 “처절하게 희생하며 가비타를 돕는” 오티리아를 대비시키며 남성의 책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부각한 것은 아쉽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해자라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여성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 억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 억압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은 여성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가들이다. 출산과 양육 등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개별 가정에 떠넘겨지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억압적이다.

지배자들이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속셈과 맞닿아 있다.

이현주

공동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투사들

장기 투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합 총회를 갖고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3월 25일 용산웨딩홀에서 뉴코아·이랜드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GM대우비정규직지회 등 19개 노조 2백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취입하자마자 코스콤과 재능교육 농성장을 짓밟은 이명박에게 분개해 있었다.

이명박의 탄압에 함께 맞서자는 공감대는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결성으로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연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들 끼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사무금융연맹,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공공연맹 등 상급노조와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자”고 제안했다. 다른 한 노동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노총과 각 연맹 모두에 제안해서 같이 하도록 하자. 그래야 재정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상급노조들이 비정규직 투쟁 연대를 강화하는 고무적인 조짐도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3월 31일 코스콤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사무금융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고 공공연맹도 광주시청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추진중이다.

공투단은 앞으로 코스콤 농성장, 이랜드 각 매장 등지를 순회하며 투쟁할 예정이다. 정중남

학원 24시간 운영 저지 투쟁의 승리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아예 제한을 없애려는 시도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적극 추진했던 교육문화위원장 정연희는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들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십수 명에 달한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을 ‘공장의 기계’들처럼 밤새도록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 단체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대 행동을 건설했다. 학원 24시간 운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가 이어졌다.

개정안이 상정되는 18일 오후에 시의회 앞에서 교사·청소년·학부모 등의 반대 집회가 열렸고 시의원들은 학원 심야 교습에 항의하는 팻말 시위와 구호 속에 입장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학원 교습시간을 원래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교사·청소년·학부모 등이 함께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고교등급제, 영어몰입교육, 진단평가, 일제고사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개명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분노와 교사·학부모 등의 연대가 이명박의 입시경쟁 강화에 맞서 싸우는 열쇠일 것이다.

허그루

한국외대 징계 철회 투쟁

법원이 무기정학 효력을 정지시키다

지난 2006년 8월 파업중인 한국외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대 당국이 내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5백86일째 진행중이던 무기정학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징계가 “징계권 남용”이며 내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고려대 출교생들이 그랬듯

나도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은 수강 등록 마감일인 3월 28일까지 가처분 판결이 못 나오게 하려고 애썼지만, 나와 김승교 변호사는 고려대 출교생들의 복학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이번주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로써 법적으로 외대 당국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그러나 그간 총장 박철의 행태를 보면 가처분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외대 당국이 법까지 무시하면서 부당 징계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학교 안팎의 징계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명훈(한국외대 무기정학생)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 할인마트 계산원, 호텔 서비스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서서 일한다는 것이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의자를 제공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앉는 것이 금지된 노동자들은 인격적 모욕감을 느낄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많이 걸리고, 여성의 경우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높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47퍼센트가 하지정맥류로 고생한다

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설문 받거나 캠페인을 알리는 소식지를 나눠 주고 있는데,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일 텐데도 의사를 적극 밝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노동자들 자신의 단호한 투쟁이 야말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들에게서 노동자들의 존엄을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명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동자들의 투지와 지도부의 동요

지난해 말 언론은 기아차 사측이 공장과 설비를 투기자본인 GE캐피탈에 매각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즉각 사측에 항의했고, 사측은 검토한 사실조차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3월 21일 기아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하리 승용공장 설비를 GE캐피탈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아·현대 자본의 사기극에 기아차 노동자들은 매우 분노했고,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3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매각이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기아차 3개 공장이 전면 파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의원은 기아차 노조 지도부의 의지를 믿고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고 현장을 조직하며 투지를 다지고 있었다. 재벌의 머슴을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파업 1시간 전에 허점투성이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파업을 일방적으로 유보해 버렸다. 물론 기아 사측은 GE캐피탈의 확인서와 공증을 통해 기아차의 소유권을 확인받고, 분기별 조기 상환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기아차 노조 지도부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부분적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다고 기아 사측과 GE캐피탈 매매계약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진 않는다.

우익적 정책과 노동자 탄압, 비리와 공천 개싸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기아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커다란 압력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양보 시늉을 믿고 파업을 유보하고 말았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동자들은 투지는 여전하다. 파업 유보 후 대의원 소집에서 대의원 절대 다수는 회의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상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했고, 결국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 기아차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사측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력한 공동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우용(기아차지부 조합원)

지역 사회 포럼

서울 서부지역 사회포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시: 3월 31일(월) 오후 8시

연사: 강동훈(주간 <맞말> 기자)

장소: 신촌 아트레온 토즈(신촌 아트레온 극장 측면 출입구 13층)

참가비: 3천 원

문의: 016-785-4957

서울 동부지역 사회포럼

이명박의 '경제살리기'와 한국경제 — 전망과 대안

일시: 4월 17일(목) 저녁 7시 30분

연사: 정성진(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소: 건국대학교 상허관 109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3405-0506

대학 맑스주의 포럼

시립대

맑스주의는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일시: 4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시립대

문의: 010-6838-1968

서울대

사회주의 — 좋은 사상, 그러나 가능한가

일시: 3월 31일(월) 오후 6시 30분

연사: 정병호(다함께 운영위원)

장소: 자연대 24동 207호

문의: 010-8338-7822

단국대

낙태 — 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해야하는가?

일시: 4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단국대

문의: 010-3555-0773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건설하자

장병호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서명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3월 28일 공동행동에는 학생·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할 듯하다. 이날 몇몇 대학 학생들은 학생총회와 동맹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양보하는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 계획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계획 어디에도 이명박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계획은 없다.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의 지적처럼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계획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것이다.

민주당도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 상한제 등 등록금넷의 5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록금을 반 정도로 낮추겠다는 분명한 의사와 이행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 생색내기 공약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이 2배로 인상되는 데 앞장선 주범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학을

수익성 논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사립재단들은 맘 놓고 이윤 불리기 경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생색내기

따라서 재벌과 사립재단의 이윤을 털 끝만큼도 건드릴 의향이 없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용 생색내기 공약을 믿어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등록금넷의 주요 단체들이 3월 28일 범국민대행진에서 민주당에게 연설 기회를 주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등록금 인상 주범이 마치 우리 편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록금넷은 기성 정당들을 통한 입법 청원에 기대지 말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실질적 '반값 등록금' 안을 지지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 행동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제약회사 임상실험 대상이 되거나 피를 팔아서까지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와 서민 가정의 고통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3월 '개나리 투쟁'으로 등록금 인상액의 일부를 낮추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해결을 바란다.

따라서 3월 28일 행동의 성과를 이어, '반값 등록금'과 더 나아가 무상교육을 쟁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능한 곳에서는 기층 대학과 지역 차원의 상설적 등록금 투쟁 연대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정부에 맞선 공동행동과 함께 대학 당국의 등록금 인상에 맞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학생총회, 동맹휴업, 점거농성 등의 대중 행동에 더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등록금 문제가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후속 공동행동을 5월 1일 메이데이 행동과 결합시킨다면 노동자·학생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